HOME 전국 인천/경기

김경호 의원 "DMZ, 세계적 유산으로 남기고자 'LIVE DMZ' 준비"

이성애 기자 (godnth119@newscj.com) | 승인 2020.07.24 07:55

김경호 농정해양위원회 의원이 지난 22일 가평상담소에서 DMZ 정책과 관계자들과 행사 개최를 위한 행정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천지일보 2020.7.24

가평상담소서 DMZ 행사 관련 논의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경호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DMZ 정책과 관계자들과 행사 개최를 위한 행정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경기도는 오는 9월 DMZ 홍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LIVE DMZ 붐업 콘서트'를 가평 자라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인의 참여 폭을 넓히고 홍보함으로써 DMZ의 가치 및 평화 메시지를 전달해 분단의 아픔을 기억하며 통일 바라는 데에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역 명소에서 전시 공연 행사를 추진하는 방식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방역지침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프라인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LIVE DMZ'를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개최 날짜는 9월 4일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장소는 자라섬으로 하되 자세한 행정적 사항은 경기도와 가평군이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호 도의원은 "DMZ는 우리의 현실이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징으로 남아있다"며 "분단국가의 아픔이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세계적인 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준비되는 것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성애 기자

NEWSCAPE

경기도, 문화재청-강원도와 북한 민족유산의 현황과 보호관리 체계 논의

- DMZ 관련 업무협약 체결('19.7.11, 경기도-문화재청-강원도)에 따른 공동주최
- 2020년 총 4회에 걸쳐 북한의 민족유산 분야에 대한 포럼
- 7월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2차 포럼 개최

기사 입력 2020-07-24 07:47:26

[뉴스케이프=최익환 기자] 경기도는 문화재청, 강원도와 공동주최로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2020년 제2차 남북문화유산정책포럼을 개최했다.

▲ 2020년 제2차 남북문화유산정책포럼 모습 [사진=경기도]

올해 남북문화유산정책포럼의 주제는 '북한의 민족유산'으로 총 4회 개최될 예정이며, 1차는 지난 5월 14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진행된 바 있다.

경기도.경기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은 '북한 민족유산의 현황과 보호관리체계'를 주제로 △북한의 건축문화재 보존현황과 과제 △북한 민족고전학의 성립과 전개 △세계유산 개성역사유적지구의 보존관리 현황 △북한 문화유산의 조사와 관리 △북한 자연유산의 현황과 과제 등 총 5개의 발표와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오태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를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의 문화유산 교류와 협력이 선제적 조건이라 생각한다"며 "올해 4차에 걸쳐 개최되는 포럼을 통해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체계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20년 제2차 남북문화유산정책포럼 모습 [사진=경기도]

한편 남북문화유산정책포럼은 지난해 문화재청에서 남북문화재 교류협력 확대에 따른 정책수립을 위해 설치한 자문기구다. 비무장지대 보존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과 남북문화재 제도의 비교분석,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등 주제를 정해 포럼을 개최하고 그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케이프 http://www.newscape.co.kr/news/view.php?idx=49741

외교·안보

통일부,입장 번복해 유엔사의 '자유의집'사용 허용

김명성 기자

입력 2020.07.23 23:42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자유의 집'사용을 불허 했던 통일부가 23일 입장을 번복해 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오는 27일 '정전협정 67주년' 기념행사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22일 유엔사의 (사용)재요청에 따라 정전협정 기념식에 자유의집 시설 사용 협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판문점 자유의집

통일부는 입장 번복 이유와 관련해 "최근 수도권 방역조치 완화로 공공시설 내 행사가 가능해졌고 행사일(27) 우천 예상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통일부는 올해 유엔사의 '7·27 정전협정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판문점 내 자유의 집 사용 요청을 불허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최근 긴장한 남북 관계를 이유로 들었다. 통일부가 2013년부터 허용해오던 유엔사의 '자유의 집'사용을 불허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비무장지대(DMZ) 출입 문제를 둘러싼 유엔사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는 유엔사가 남북 철도 연결, 인적 교류, 인도적 지원 물자 등 비군사적 분야의 통행까지 막는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정부가 북한에 기관차, 타미플루 등을 보내려 했으나 유엔사가 각각 시일이 촉박하다거나, 대북 제재 품목(트럭) 등의 이유로 불허하는 바람에 무산된 바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비군사적 성격의 비무장지대(DMZ)출입에 대한 유엔사의 법적 허가권 문제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뉴스 프리존

성남시, 독자적 대북지원사업..23일 통일부 승인

고상규 기자 | 승인 2020.07.24 08:32

- 민간단체 통하지 않고도 남북교류 협력 가능

-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지자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남도, 강원도, 경남도, 광주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성남시 등 총 11곳

ⓒ성남시청

[뉴스프리존 경기=고상규 기자]경기 성남시의 독자적 대북지원사업이 가능해졌다. 지난 8일 성남시가 신청한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을 23일 통일부가 승인하면서다. 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북한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교류를 잇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북한 어린이 의료물자 지원사업 ▲남북 공동참여 어린이 기능성 보충제 개발사업 ▲메디바이오 분야의 남북 상생 모델 구축사업 ▲동북아 국제학술대회를 통한 남북지식공유사업 등이다.

시는 북한과 안정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 내년까지 50억원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생명공학기술 기업, 대형병원, 성남시의료원, 의과대학 등과 연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북한과 직접 접촉해 동북아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진행하고, 판교테크노밸리 내 정보통신기술, 기업과 연계한 남북테크노밸리 조성 등 교류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10월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했다.

규정 개정 이후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지자체는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강원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성남시 등 모두 11곳이다.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상규 기자